

		<b>보 도 자 료</b>		
		배포일시	2019. 10. 4.(금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상황총괄대응과	담 당 자	·과장 김동익, 사무관 이승엽, 사무관 이종문 ·☎ (044) 201-4152, 4157, 4155	
보 도 일 시		2019년 10월 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6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‘현장 안착 중’ 9월말 계도기간 후 300인 이상 업체 대부분 준수 근로시간 단축으로 7천여 명 상당 일자리 창출 효과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고 밝혔다.
  - '18년 2월말 개정된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\* 되었으나,
    - \* (시행시기) △300인 이상: '19.7월, △50~299인: '20.1월, △5~49인: '21.7월
  - 노선버스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가 인력채용,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(7.1~9.30)을 부여한 바 있다.
-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당초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 81개 중 60개(74%)가 개선계획을 제출\*하고 계도기간을 부여받았으나,
  - \*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21개사는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 시행중
  - 10월4일 현재, 개선계획 제출업체를 포함한 전국 300인 이상 업체 대부분(77개, 95%)이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
    - \* 정부 합동점검(9.25.~9.26.), 10월 1주 유선점검

- 나머지 4개 업체도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노사협상과 신규 인력 채용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.
-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점검회의, 관계기관 합동점검(국토부·고용부·지자체 등, 3차례\*)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300인 이상 버스 업체들의 신규인력채용, 임단협 타결 등을 통해 적극 독려해 왔으며,
  - \* (1차 점검) 7.10.~18, (2차 점검) 9.3.~9.6, (3차 점검) 9.25.~26.
-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확대('19년 2.5천명→3.2천명),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 2회\*(6·8월) 개최, 국도변 교통안내전광판(VMS)를 활용한 승무사원 채용홍보(7.1.~12.31.), 버스승무사원 채용 홍보포스터 주요거점 게재\*\* 등을 통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해 왔습니다.
  - \* 1회 박람회(6.20.~21, 수원 컨벤션센터), 2회 박람회(8.13.~14, 일산 킨텍스)
  - \*\* 고속도로 휴게소(195), 고용부 복지센터(101), 교통안전공단 검사소(73) 총 409곳 게재
- 이러한 노력들로,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이 점차 개선\*되어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,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7천여명 상당 일자리 창출의 효과\*\*도 나타나고 있으며,
  - \* ('18.7이전) 무제한 근로 → ('18.7.) 주68시간 → ('19.7.) 주52시간(300인이상)
  - \*\* 전국 운수종사자 수는 근로기준법 개정('18.2.) 이후 현재까지 7천명 증가('18.2. 9.4만명→ '19.9.10.1만명)
- 올해 노사 간 임단협도 대부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\*에 있어 대규모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.
  - \* 전국 노선버스 483개 업체 중 임단협은 377개(78%)가 완료되었으며, 300인 이상의 경우 81개 중 69개(85%)가 완료
- 국토교통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대응반 김상도 반장은 “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운수종사자의 ‘일과 삶의 균형’을 넘어

과도한 근로로 인한 **졸음운전사고\***로부터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·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으로,

-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‘안전한 대한민국’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이승엽 사무관(☎ 044-201-455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